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 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반노동 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총파업을 힘 있게 결정하고 실질적 조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 한다.

왜 4월인가?

한상균 집행부는 4월 총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확대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빠르게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과 단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악을 통한 임금과 노동조건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균 집행부가 4월 “선제적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수년 동안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계획하곤 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태에 끌려가는 파업 계획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런 파업 계획은 점점 더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이미 박근혜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를 공공연히 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 중순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4월 말로 가면 보궐선거에 이목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실질적 총파업

4월 총파업이 효과를 보려면 선제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기도 해야 한다.

총파업이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박근혜가 반노동 공세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무늬만 총파업’이거나 단시간의 형식적 경고 파업으로는 박근혜를 멈출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

박근혜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단기”일지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이후 부문별 파업과 투쟁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산별(사업장)에서만 4월 총파업에 들어가고, 실제로는 각자 조건에 따라 일정을 늘어놓는 식으로 하면 총파업이 이름에 값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 산별(사업장)의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조가 민주노총이 정하는 일정에 맞춰 함께 파업에 들어가도록 실질적인 조직을 해야 한다.

레임덕 박근혜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이 20퍼센트 대로까지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박근혜 취임 이후 최고로 **싸우**

기 좋고 유리한 때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늦추고 일정을 미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위기에 빠진 지금, 기세 좋게 총파업에 나서 저들의 기세를 제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투쟁을 뒤로 미루면 저들은 전열을 정비해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에서 공격을 재개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에게 그런 짬을 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삶을 하락시킬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런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투쟁에 나선다면 전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각개격파 시도에 단결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 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위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1월 12일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은 그 공격이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전면적 공격에 맞선 전면적 대응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자본가 계급의 일치된 지지 속에 이런 과제를 부여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가 아니면 이를 추진할 여유가 많지 않다. 특히,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봐도 박근혜가 필사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명하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혁, 비정규직 확대 등 박근혜의 파상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격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도,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박근혜가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에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정규직은 단협으로 막을 수 있

다’거나 ‘야당이나 국회에 기대 공격을 늦출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제 도입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공공-민간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박근혜의 이간질에 맞서려면 서로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단결이 ‘공리’여서가 아니라,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 공공부문 제물 삼기를 방관한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 임금체계 개혁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함께 싸워야 한다. 잘 조직된 부문의 자신감을 분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 모두는 공공부문과 정규직을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부문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지지해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총파업 성사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맞춰 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변성호 집행부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도부의 결의는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전교조 전국일꾼연수(대의원대회 전에 열리는 기층 활동가 대회)에서는 전교조 연가 투쟁 시기를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맞추고, 투쟁 규모도 더 확대하자라는 지도부의 제안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층 간부들은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박근혜에 맞서 싸워볼 만하다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학교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4월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 대구, 충남 등 지역본부에서도 총파업 조직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한 건설노조 지부장은 “건설현장의 문제뿐 아니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무원연금 등으로 3차례 이상 조합원 교육을 했습니다. 어렵다던 조합원들도 ‘이제 4월에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고 말합니다” 하고 말했다.

4월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려면 기층 활동가들이 나서서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의원들이 앞장서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

노동자 연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안)을
지지하라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